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차관들과 함께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창조경제 정책 가속도 낸다

정부,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글_안경애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부 차장 naturean@dt.co.kr

일 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키워드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올해 6조 9천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40조 원 규모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목표,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 중심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며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목표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구현'이 제시됐다. 이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이 발표됐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투자 강화

먼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미래창조펀드(5천억 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창업 생태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업 플랫폼 다양화, 멘토링 강화, 제도전 환경개선 등에도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특허 투자펀드 2천억 원이 만들어진다.

벤처·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동원된다. 중기·벤처의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주식시장(코스닥, 코넥스 등),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벤처 중소기업에 과감하

게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중기 전용 코넥스 개설, 코스닥 상장, 관리제도 개선, M&A 관련 세제감면 등을 추진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우체국 금융자금 활용 벤처 투자, M&A 관련 펀드 등을 도입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미래창조펀드 5천억 원, 청년창업펀드 1천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 원 규모가 조성된다. 또 보증제도가 확대돼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이 신설된다.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은 5억 원 한도로 100% 보증이 원칙이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기술·산업 융복합 맞춤형 보증이 신설되고, 1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보증도 도입된다.

과학기술과 ICT 접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협력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과 중소기업(수탁)이 사전계약을 통해 추진목표와 성과공유에 합의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계약에 따라 성과를 공유(현금보상, 장기계약, 공동특허 등)하는 제도이다. 특히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신시장으로 이어지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새로운 접근이 시도된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T융합 혁신센터, 민관 공동 차세대 소재·부품개발 등을 추진한다. 낙후된 전통산업 부문에서는 IT 기반 축사관리시스템 확대, 에너지 절감형 그린하우스 개발, 전통시장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확대 등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행복 향상의 일환으로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한 60~80대 한국인 표준치매 뇌지도를 2017년까지 완성하고, 10개 내외의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15개

내외의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기술기반 대응합을 통한 신수요, 신산업 창출 유망 과제 10개를 발굴·지원한다.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속도가 가해진다. SW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SW융합기술 개발, SW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보안 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천 명 수준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작·창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4천억원 규모)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5대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와 디지털콘텐츠를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한다.

인재양성시스템 개선, 과학기술·ICT 역량 높여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학력, 스펙 이외에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인재를 선발, 전문가 멘토링 후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해외 산업현장의 실무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도 새로 생기는 창업비자(가칭)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보다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일도 꾸준히 이뤄진다.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인큐베이팅 R&D,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목표로 10 인터넷, 차세대 와이파이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3D, UHD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방송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한 신규 주파수 발굴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창조경제 전략이 국가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창조경제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개최해 국민이 도전·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도 우수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상상과 창조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IT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고, 정부통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센터를 2015년에 설립한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ST**